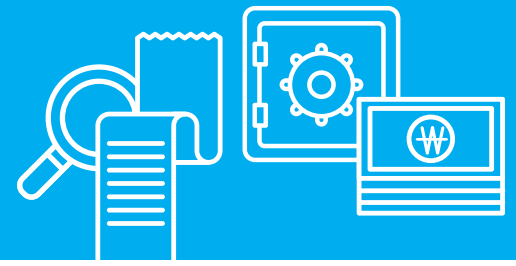


01

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!

세계



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등 원천징수세액 합리적 조정

시행일 | 2015. 7. 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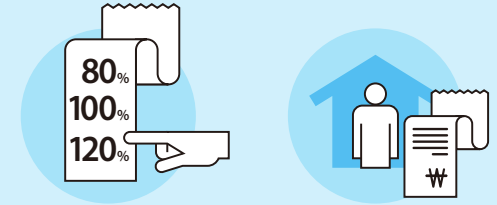
근로자의 연간 세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고,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

Before



-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

After



- 원천징수방식 선택 허용 (80%, 100%, 120%)
- 1인 가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
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

시행일 | 2015. 7. 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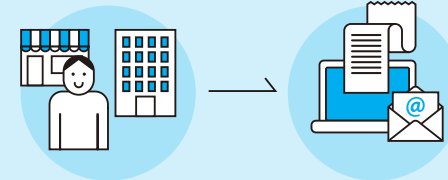
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하고,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, 자진발급 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

Before



-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

After



-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(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면세사업자)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함
-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, 자진발급 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

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(PG)의 외국환 업무 영위

시행일 | 2015. 7. 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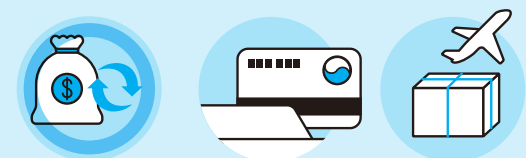
지금까지는 해외결제사(Alipay 등)와 직거래계약을 체결한 일부 국내 대형쇼핑몰만 해외판매가 가능했지만, PG의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짐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가 간편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짐

Before



- PG의 외국환 업무 불가
- 직구 : 글로벌카드로만 결제 가능
- 역직구 : 해외결제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은 일부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판매 가능

After



- PG의 외국환 업무 영위 가능
- 직구 : 국내전용카드로도 구매 가능
- 역직구 : 중소 인터넷 쇼핑몰도 해외 판매 가능

02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!

산업·특허·국세·중소기업



지식산업센터 인정요건 완화

시행일 | 2015. 7월

산업간 융합·연계효과 촉진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인정 요건 완화

Before



6개 이상의 공장

-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어야 함

After



공장 지식산업사업장 정보통신사업장

▶ 총 6개 이상의 사업장

- 공장과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

KS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

시행일 | 2015. 7. 7.

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KS인증기업이 한국산업표준(KS)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적, 금전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예정

Before



정기검사

품질교육

- 정기심사 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도록 함
- 품질교육 이수시간 20시간

After



제품심사 폐지

품질교육

-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 폐지
- 품질교육 이수시간 16시간

'취업 후 학자금(든든학자금) 상환방법 개선

시행일 | 2015. 6월

채무자들의 대출경력이 공개되는 고충을 해결하고 상환편의 제공

Before



- 회사에서 매월 원천공제해 상환
-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납부 방식으로 상환

After



1년분 선납

학자금 상환 신고의무 폐지

-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 선납 가능
-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 폐지, 국세청에서 고지한 금액을 납부

분할출원 가능기간 확대

시행일 | 2015. 7. 29.

지금까지 등록결정 이후 표준결정 등에 따라 추가 권리화 필요가 있더라도, 분할출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나,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에 추가로 분할출원할 수 있게 할 계획

Befor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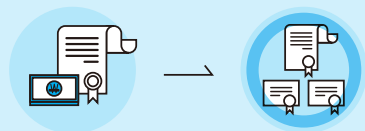


특허등록결정

추가분할출원

- 특허등록결정 이후 추가분할출원이 불가능

After



설정등록 이전 (최대 3개월) 까지

추가분할출원

- 특허등록결정 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 이전까지 가능
- 출원 계속 요건 → 설정등록일까지로 제한

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을 모태조합, 법인형엔젤 등으로 확대

시행일 | 2015. 11. 19.

정부 자원(중소기업모태조합)의 출자와 기관형 투자자(법인형엔젤)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

Before



개인만 가입

- 개인투자조합은 개인들만 가입할 수 있음

After



개인

모태조합

법인형엔젤

- 개인, 신기술창업전문회사, 중소기업모태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,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

03

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!

환경·기상·국토·해양



4.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가능

시행일 | 2015. 8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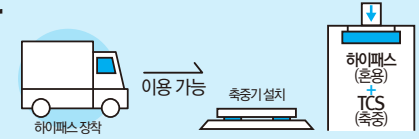
지금까지 4.5톤 이상 화물차는 중량 측정, 과적 단속 등이 필요하여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, 축중기가 설치된 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하고, 안전조치를 통해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

Before



• 4.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불가

Aft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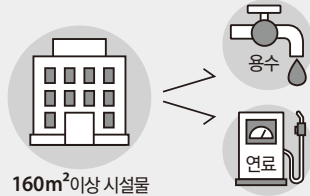
•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(진입시 하이패스 차로 이용)
• 도로법 시행령상 명시된 화물차의 경우 축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만 고속도로 진입 가능, 위반 시 처벌

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

시행일 | 2015. 7. 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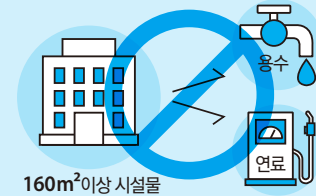
지금까지 연면적 160m²(약 48평) 이상인 시설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, 하수도 요금 등과 중복 부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 (단, 2015년 상반기분 부담금 및 체납액 제외)

Before



• 시설물의 용수 및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

After



•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

기상자료 개방 포털 운영

시행일 | 2015. 8월

종전의 분산 서비스 방식에서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고, 이해하기 쉽고, 이용하기 쉬운 기상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로 민간 활용을 확대

Before



• 분산 서비스
• 접근이 어려움
• Open API 6종

After



• 기상자료 개방 포털 운영 (data.kma.go.kr)
• 제공 자료 형식을 더욱 개방된 형태로 서비스 (데이터 오픈 포맷 txt.pdf → CSV)
• 기상자료 Open API 서비스 확대 (일반국민 대상 6종 → 21종)

국적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

시행일 | 2015. 8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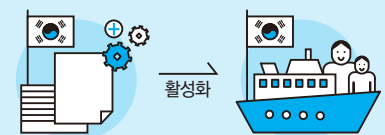
지금까지 국적 크루즈 선사 등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없었으나,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이 총합적으로 마련된 제도 시행

Before



• 지금까지는 국적 크루즈 선사 등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없었음

Aft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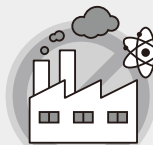
• 크루즈 산업 육성계획 수립·시행
•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
• 해외 마케팅 지원
• 공유재산의 대부
• 카지노업 허가 특례
•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

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

시행일 | 2015. 7월

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규제 개선

Before



• 화학제품 제조 시설, 물·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·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 시설 제외

After



• 유기농 화장품, 천연비누·세제 제조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등에 입지 허용
• 대기·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대상이 아닌 공장 허용

04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!

복지·여성·고용노동



어르신 틀니,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

시행일 | 2015. 7. 1.

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, 금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(의료급여) 적용을 받는 틀니(완전, 부분)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가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

Before

만 75세

비급여

- 틀니,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5세 이상
- 금속상 완전틀니 비급여

After

만 70세

의료급여

- 틀니,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
-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

시행일 | 2015. 7월

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수준 현실화 및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강화를 위해, '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

Before

- 선정기준 : 최저생계비
- 급여수준 : 최저생계비
- 부양의무자 소득기준: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가구 423만원, 그 외 298만원 (수급자 1인, 부양의무자 4인 기준)

After

- 선정기준 : 중위소득 반영
- 급여수준 : (생계급여) 중위소득 28%, (의료급여) 중위소득 40%, (주거급여) 중위소득 43%, (교육급여) 중위소득 50% 수준
-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: 485만원 (수급자 1인, 부양의무자 4인 기준)

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

시행일 | 2015. 9. 19.

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'15년 9월 19일부터 의무화 됨

Before

-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법률 미흡

After

CCTV 설치 의무화

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

-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
-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

국민연금 수급 연기(연기연금)의 선택권 확대

시행일 | 2015. 7. 29.

지금까지는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려는 경우 전액(100%)연기만 가능하여 선택에 제한이 있었으나, 앞으로는 급여의 일부(50%~90%) 연기가 가능하여 수급자 형편에 맞게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

Before

100%

- 전액(100%) 연기만 가능

After

50% ~ 100%

- 연금액의 50%~100% 연기 선택 가능

04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!

복지·여성·고용노동



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

시행일 | 2015. 7. 29.

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
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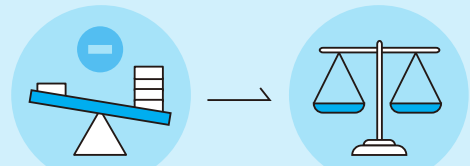
Before



Age

-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감액

After



소득 수준별 감액

소득재분배 기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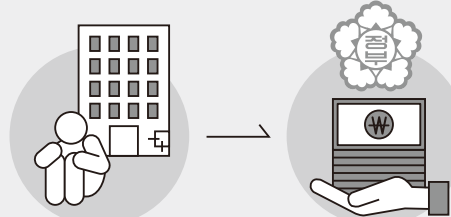
- 소득 수준별 일정금액을 감액
-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,
소득재분배 기능 강화

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

시행일 | 2015. 7월

2015년 7월부터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
체불임금 지급

Befor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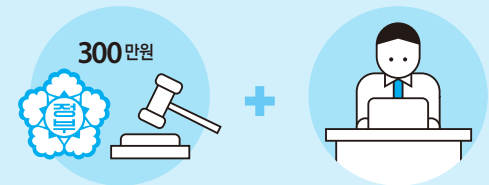


사업주 도산

국가가 체불임금 지급

-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
체불임금을 지급

After



300만원

- 사업주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해
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도 300만원까지 사업주 대신 지급
- 사업주가 용자를 받아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
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

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 의무화

시행일 | 2015. 8월

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실시 및
결과공개로 통한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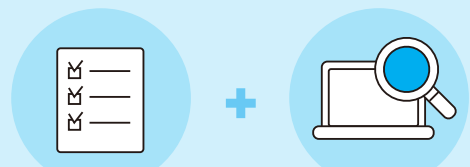
Before



종합안전점검 실시

-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실시 및 임의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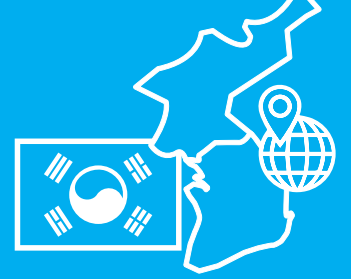
After



종합안전점검 실시

점검결과 의무공개

-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의무공개
- '여성가족부 홈페이지' (www.mogef.go.kr),
'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' (www.youth.go.kr)에 점검결과 공개



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

시행일 | 2014. 11. 29.

미래행복통장 제도의 실시를 통해 탈북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 계획

Before



• 북한이탈주민은 기초자산이 없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웠음

Aft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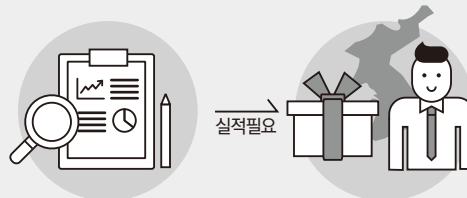
•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 탈북민이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주거 마련 등의 용도로 매월 저축 시, 저축액과 동일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정착자산 형성 지원금 지급

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개선

시행일 | 2015. 4. 2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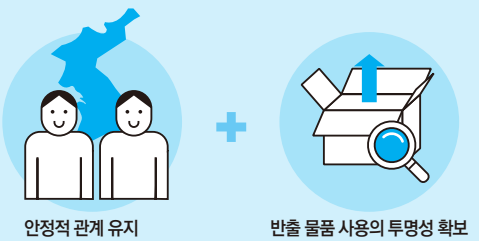
신규 민간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 실적을 먼저 갖춰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, 앞으로는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,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

Before



•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추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불편을 야기

After



•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, 반출 물품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

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서류의 전자적 처리

시행일 | 2015. 7. 1.

지금까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서류는 외교행낭 및 우편으로 국내에 송부되어 처리까지 2~3개월이 소요되었으나,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설 및 전자적 송부로 1~4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

Before



• 2~3개월 소요 (외교행낭 및 우편 송부)

After



• 1~4일 소요 (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설 및 전자적 송부)



모든 보훈단체 수익사업 가능 및 관리 강화

시행일 | 2015. 8. 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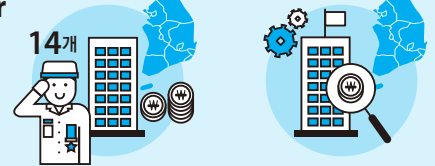
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만 허용하던 수익사업을 14개 공법단체 전체로 확대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무적 회계감사 도입 등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

Before



- 지금까지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규정된 단체만 수익사업 가능

After



- 광복회를 비롯한 14개 보훈단체가 직접 수익사업 가능
- 각 단체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
- 회계감사 등 의무화

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그 해당지역 군부대에서 우선 구매

시행일 | 2015. 7. 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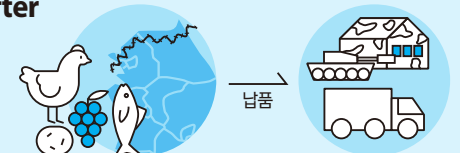
대단위 군부대 주둔에 따른 접경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그 지역 군부대에 우선 군납하게 함으로써 민·군 상생발전 방안 마련

Before



- 대단위 군부대가 주둔하여 지역 경제 발전 제약

After



- 접경지역 생산 농·축·수산물의 그 해당지역 군부대에 군납 확대
- 접경지역 생산 농·축·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 제조하는 업체의 접경지역 군부대 납품 시 우대

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및 운용

시행일 | 2015. 12월

부모들이 직접 군 복무 중인 병사, 부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하여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문화에 기여

Before



- 병사를 자식으로 둔 부모가 자식들이 전화하는 것에 의존

After



- 군 복무 중인 병사를 자식으로 둔 부모가 직접 안부 확인 가능
- 전국 병영생활관에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(44,686대)

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 시행

시행일 | 2015. 7. 1. (시행 이후 기피자부터 적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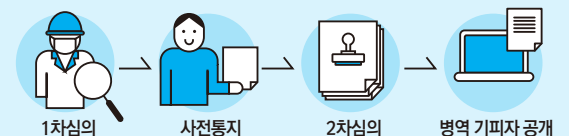
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병역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 및 기피자사전 예방 등 성실 병역이행 유도

Befor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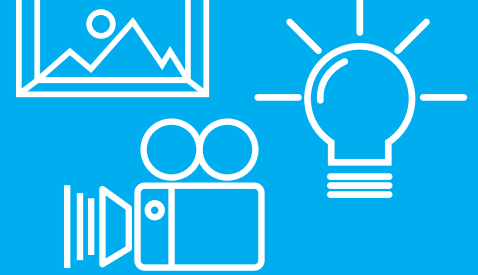


-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은 고발 및 형사처벌

After



- 국내·외 병역기피자 명단을 홈페이지 (www.mma.go.kr)에 공개
- 공개내용 (6개 항목) : 성명, 나이, 주소, 기피일자, 기피요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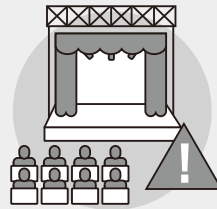


모든 공연장의 지방자치단체 등록 및 안전관리 강화

시행일 | 2015. 11. 19.

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

Before



- 현행법상 미비점 보완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 미흡
- 객석 수 : 50석 / 객석 바닥면적 50㎡

After



- 공연장 등록 대상 확대
-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
- 무대시설 안전진단 대상 확대 및 강화
-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강화

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및 안전관리 강화

시행일 | 2015. 8월

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이해, 안전관리 실무 등의 의무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

Before



-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미흡
-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업무 미흡

After



-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
-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의무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
-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내용 및 기간 규정
- 유원시설업자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기구·기구의 안전성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

진입규제 완화 및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

시행일 | 2015. 8. 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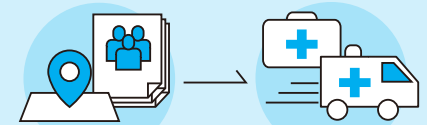
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및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

Before



-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도 신고 대상
-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로 제출 혹은 방문 제출

After



-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신고 대상 제외
-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의무 강화

시행일 | 2015. 8월 / 2015. 12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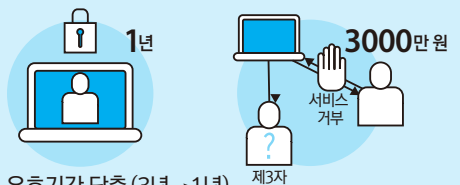
정보통신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

Befor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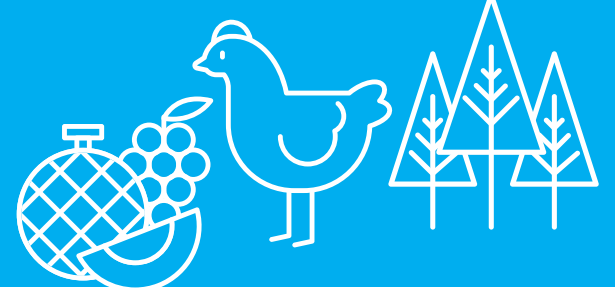


- 개인정보 유효기간 (3년)
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(1천만 원 이하)

After



-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(3년→1년)
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(1천만 원 이하→3천만 원 이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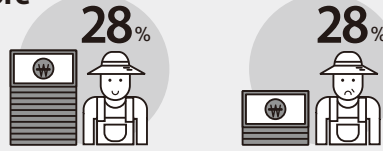


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시행

시행일 | 2015. 8월

지금까지 소득·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정률 지원하였으나, 앞으로는 소득·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

Before



소득·재산 수준 관계없이 정률 지원

- 소득·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정률(28%) 지원

After



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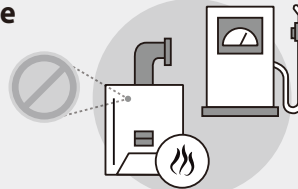
- 가입자의 95% (보험료 부과점수 1,800점 이하)는 정률 지원(현행)
- 상위 4% (1,801~2,500점)는 정액 지원
- 최상위 1% (2,501점 이상)는 지원 제외

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에서 경유 제외

시행일 | 2015. 7. 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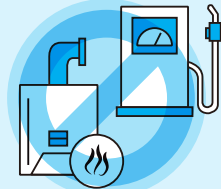
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, 유종별 사용목적, 면세 경유 부정유통 방지 등을 고려하여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

Before



- 2010년 1월부터는 신규 난방기에 대해, 2011년 7월부터는 중고로 취득한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 제한

Aft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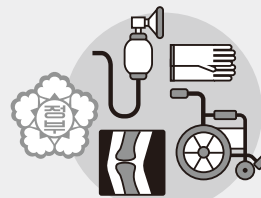
-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

저위험 의료기기 인증신고의 민간위탁제 도입

시행일 | 2015. 7. 29.

그간 위해도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전담하던 의료기기 허가·신고 업무를 위해도에 따라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선택과 집중하여 관리

Before



- 위해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기 허가·신고 업무는 정부에서 전담

Aft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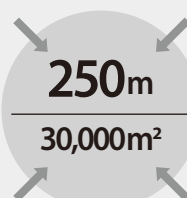
- 고위해도 의료기기는 정부에서 허가하고 저위해도 의료기기는 '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'에서 인증·신고

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 제한 규정 폐지

시행일 | 2015. 9. 2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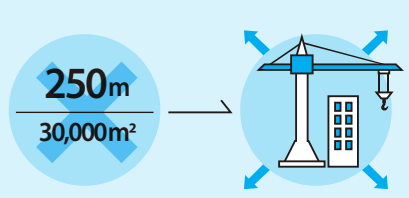
산지전용허가 시 250미터 이내의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산지 내 산업시설 증설 등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

Befor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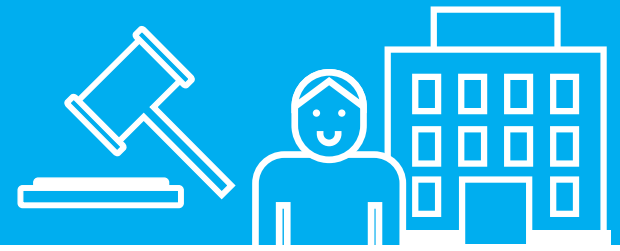


- 산지전용허가 시 250미터 이내 기존허가지 면적을 포함하여 3만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용

After



- 산지전용허가 시 250미터 이내의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
-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하지 않도록 함



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개방형직위 운영 등 공직 개방성·전문성 확대

시행일 | 2015. 7월

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운영, 국민인재 스카우트제 확대 등의 제도 시행 예정

Before



-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·외간 경쟁을 통해 임용
- 고공단 '가' 등급에 한해 공모절차생략 및 면접예외 가능

Aft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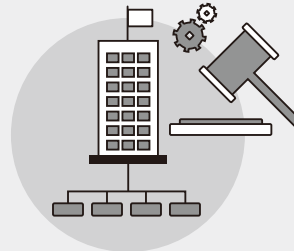
- 개방형 직위 일부를 민간인만 모집대상으로 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·운영
- 국민인재 스카우트제 확대 (대상확대 : 실장급 → 과장급, 면접예외 확대 : 실장급 → 국장급)

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

시행일 | 2015. 7. 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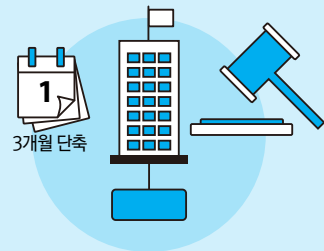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의 경우 채권·채무 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

Before



- 제1회 관계인 집회 의무
- 간이조사위원제도 부존재
- 채권자 수 기준 의결 요건 없음

After



- 제1회 관계인 집회 재량화 (회생절차기간 약 3개월 단축)
- 간이조사위원 제도 신설
- 채권자 수 기준 회생계획안 의결 요건 추가

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실시

시행일 | 2015. 7. 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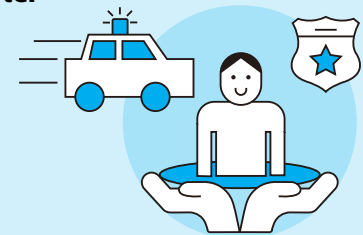
현재까지 신변안전조치는 「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」 등 일부 법률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였으나, 개정 가폭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의 보호,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·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등의 신변안전조치 실시

Before



- 신변안전조치는 일부 법률에서만 인정되는 제도

After



-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실시 (피해자를 보호시설 인도,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)